
2026년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

2025. 12.

1. 2026년 주요 추진계획

경영비전

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**대한민국 우정**

미션

우체국 인프라의 역량강화를 통한 **고품질 우정서비스** 제공

5대전략 15개 과제 적극 추진

전략 1	우정 디지털플랫폼 구축	【과제 1】 AI 디지털 역량 강화
		【과제 2】 디지털 채널 확대
		【과제 3】 디지털 인프라 구축
전략 2	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	【과제 4】 우편서비스 경쟁력 제고
		【과제 5】 우편 수익구조 개선
		【과제 6】 물류·집배 효율적 운영
전략 3	금융사업의 성장역량 조성	【과제 7】 국민금융 플랫폼 구현
		【과제 8】 핀테크 대응
		【과제 9】 자산운용·리스크 관리 선진화
전략 4	온 세상을 연결하는 공적가치	【과제 10】 국민생활 비서·민생 지킴이
		【과제 11】 공익형 수익사업 발굴·확대
		【과제 12】 사회적 책임 경영
전략 5	안전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	【과제 13】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
		【과제 14】 일 잘하는 우정조직
		【과제 15】 노사 상생문화 정착

⇒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임 본부장 취임 후 비전, 목표 및 전략 등 새로 수립

* 우정사업법 제6조 제2항(경영합리화계획) :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수립

참고 1

대통령님 우정사업 관련 당부말씀

□ 2026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시 당부사항(우정사업 관련)

미국에서는 여론조사 등 집집마다 방문하여 조사하는 사업을 미국우정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도 정부기관에서 우체국에 위탁하는 사업을 검토하면 좋을 듯합니다. 예를 들어,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(통계)조사사업 등을 실시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정사업본부에 위탁을 하면 기본 인프라를 통해 수행하므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.



대통령님께서서는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(2025. 12. 12.) 시

지방균형발전 및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우편 등과 같이

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하여 **복지·행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창구 역할**을 할 수 있도록

공공서비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당부

아울러 **포용금융 정책의 적극 실천**과 함께

범부처와 협업하는 **마약류를 포함한 우편물 검색** 방향성 등을 언급

□ 2026년도 범정부 협업사례 소개 : 빈집정비사업 추진

전국 26만호 빈집! 안전사고, 범죄발생 우려
“이제, 우체국이 함께 찾겠습니다.”



(사례) 최근 부산에서 20년 넘게 방치된 빈집이 붕괴하며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 등 다수 발생

(범정부 TF) 행안부, 국토부, 17개 시도, 민간 등

(협업방법) **집배원**을 활용하여 **빈집 사전조사**

* 전기, 수도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집의심주택 선정 → 체크리스트 수행

(기대효과) 국가적으로 **79억원 비용절감** 예상

* 26만 빈집 현장조사비용 現 178억원 → 개선 後 99억원(4.4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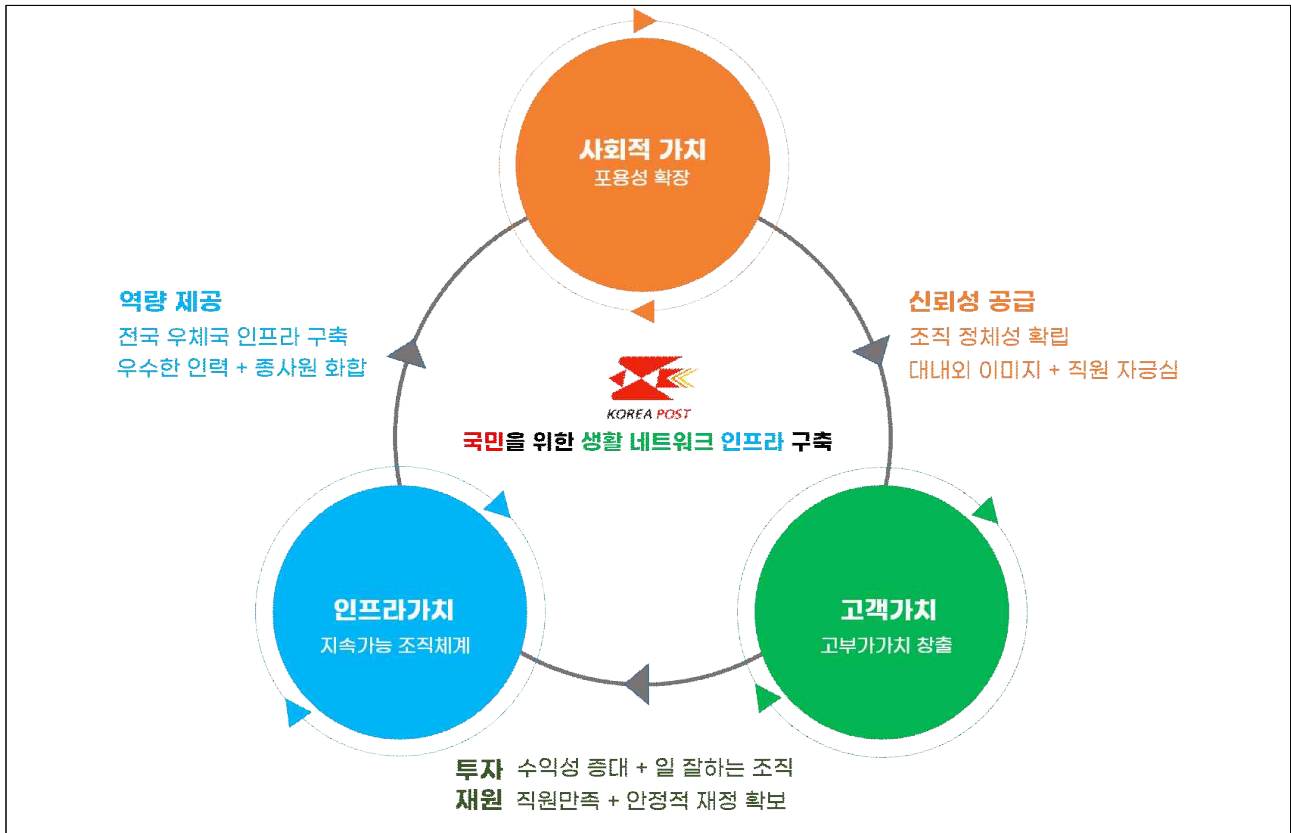
vs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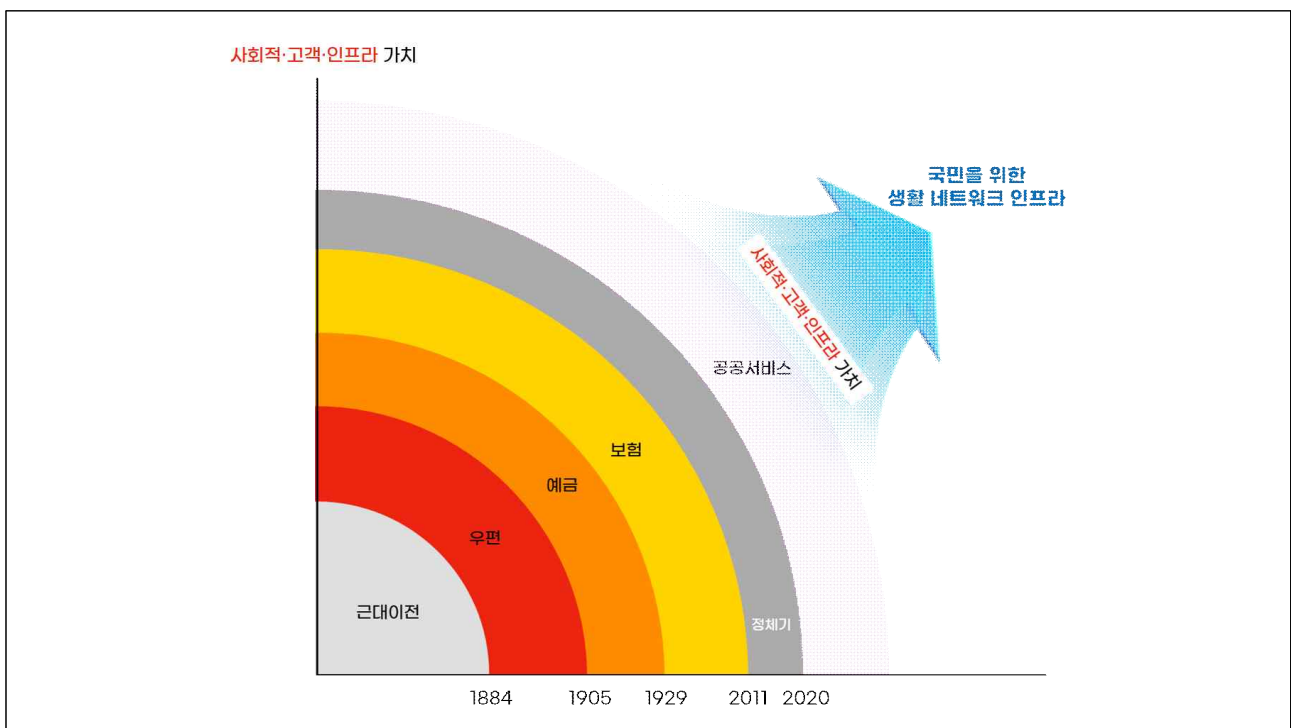
빈집현장조사원
5 ~ 8만원

집배원
5 ~ 6천원

참고 2 우정사업 미래방향



□ 우정사업 영역 확장



전략 1

우정 디지털플랫폼 구축

◇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현장의 안전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편·금융부문 전반에 AI 등 디지털혁신을 접목하겠습니다.

□ AI 디지털 역량 강화

- (AX 물류혁신) 고비용 구조의 물류처리 한계 극복 및 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X 혁신을 통한 물류처리 기반 마련('26)

※ 과기정통부 '스마트물류 기술실증화' 사업 참여 : 180억원(물류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10종)

- (실증사업 추진 과제) ①3D AI소터 ②상차 로봇팔 우편물 구분 ③기계 투입 자동화 ④운반용 파렛 이송 로봇 등 추진

- (가용자원 확충) AI 도입·활용에 필요한 핵심자원(GPU 등)을 확충하고 기보유 자원* 활용도 제고 및 AI 전문 전담팀 구성·운영('26~)

* GPU(V100) 8대 : 금융 3대(AI로보텔러), 우편 3대(콜센터 음성녹취), 정보보호 2대(침입탐지)

□ AI 디지털 채널 확대

- (AI 우체국) 화상상담 등을 갖춘 대면창구 수준의 창구업무가 가능한 AI창구를 구축*하고, 통합 챗봇 민원상담 고도화('26~)

* 디지털데스크 설계 ISP('26년 2억원) → 본사업 예정('27년, 약 50억원, 시범기기 2대 기준)

- (AI + 보험)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자동심사 프로세스* 구축, AI기술을 통한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탐지 강화('26)

* 실손보험 자동심사 구축('26.上) → 정액보험 자동심사 구축(~'27.下) → AI기반 자동심사('28.下)

□ 디지털 인프라 안정적 운영

- (인프라 안정성 강화) 정보시스템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손실 없이 빠른 서비스 재개(예시 : 1시간 이내)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추진

* 범정부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우편·금융 시스템 모두 참여하며, '26년 시스템 설계(ISP) 후 이르면 '26년 말부터 구축 개시 ⇨ '28년 하반기 중 완료(전망)

- (침해예방) 취약점 분석·관리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강화('26년)

전략 2

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

◇ 우체국이 경쟁력 있는 상품·서비스 분야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, 물류체계 개편을 통한 빠른 배송 등 고객감동을 이어가겠습니다.

□ 우편서비스 경쟁력 제고

- (배송서비스 혁신) 고객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자체 및 민간제휴 등을 통해 당일·일요배송, 약속보장 배송* 등 서비스 고도화('26.下 ~)

* (약속보장 배송) 1인가구, 맞벌이가구 등을 위해 수취인이 지정한 날에 배송

- (우정 풀필먼트) 대형 풀필먼트 이용이 부담스러운 소형판매업체와 협업하여 구분 자동화·집중국 직발송 등 한발 빠른 배송체계** 구축('26)

* 우체국, 집중국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이크로 풀필먼트(MFC) 활용(3PL 유치)

- (편의점 + 접수 제휴) 도시권 고객의 시간적·공간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편의점과의 제휴를 통해 다량의 접수채널 확보('26.7)

* (CU 편의점 제휴 기대효과) 도심지역 등 17,891개 접수처, 365일·24시간 접수

□ 통상우편 감소 대응 온-오프 서비스 확대

- (모바일 내용증명) 은행·추심업체 등에서 내용증명 발송 시 모바일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('26.下)

* 은행 등 다량 발송인에게 파일로 제공하여 서류관리 편리성 제고(관련법 개정 완료)

- (등기우편 영역확장) 굿즈 등 소형물품 중고거래 시장에서 수취 편의성·배송속도·가격 등 반값택배 경쟁이 가능한 준등기 서비스 강화('26.2.)

* 전용 선납봉투 판매(2,500원), 모바일 접수 → 우체통 투입 → 우편함 배송 등 경쟁력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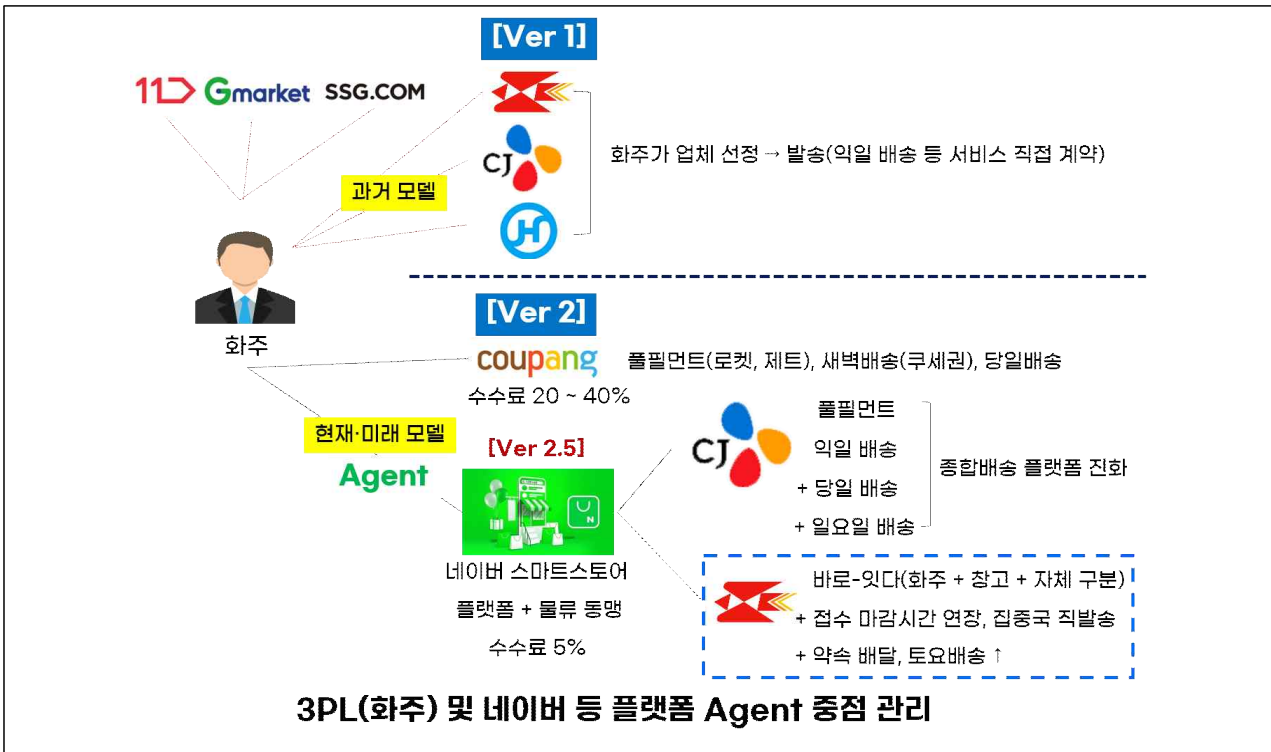
□ 물류/집배체계 최적화

- (마약류 검색) 대국민 보호를 위해 범부처와 협업하여 '25.12.29.부터 3개월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우편물 검색 시범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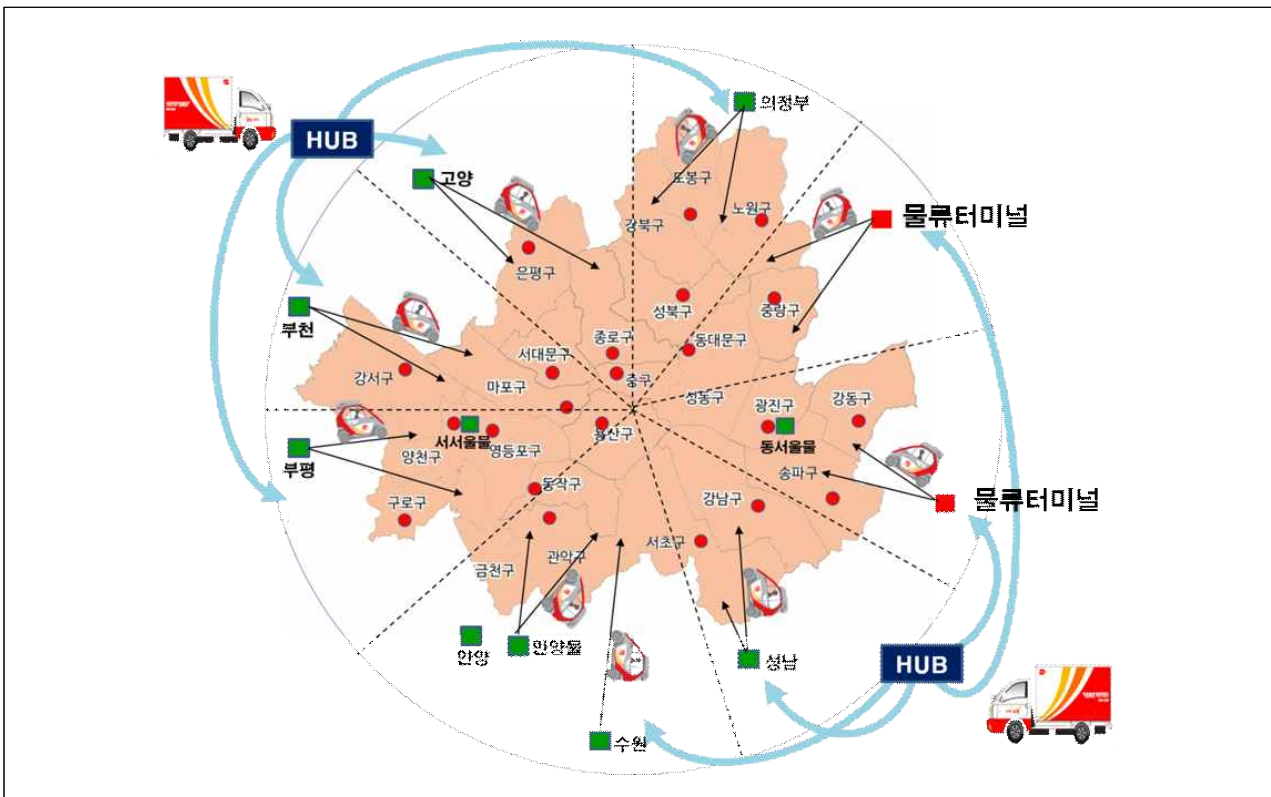
- (합리적 집배인력 운영) 겸배부담 해소를 위해 노사공동 개선안을 도출하고, 계절별·지역별 탄력적 인력운영 등으로 집배업무 경감 추진

참고 3 한발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B2C 전략방향

□ 우정사업 B2C 전략방향



□ 새로운 소포 중심 네트워크 개념도(안)



전략 3

금융사업의 안정적 성장

◇ 금융사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하고 자산운용 선진화 등을 통해 우편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□ 국민금융 플랫폼 구현

- (고객 확보) 젊은 층의 ‘의미’와 ‘재미’를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용 타깃상품* 출시, 노후재산 형성을 돕는 신규 연금상품 개발(연중)
 - * 올리브영·다이소 등 이종 업종과 제휴, 관심 분야 미션 수행 시 금리 인센티브 제공 등
- (핀테크 제휴) 빅테크^{토스·네이버} 등 · AI스타트업과 플랫폼 협력을 통한 간편인증 확대, 멤버십 결제계좌 유치 등 서비스 개발 추진(‘26.下)
- (지역화폐 체크카드 확대) 지자체의 지역화폐 참여가 확대(37개 + α, 1.2조원, 할인율 15%)됨에 따라 놓여준 주민을 위해 지자체 협업사업 추진(‘26)
 - * 지자체 맞춤형 마케팅, 온-오프라인 다채널 마케팅, 지역특화 혜택 서비스 발굴

□ 금융 성장동력 확보

- (은행대리업 참여) 우체국 금융망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참여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창구 생산성 향상 추진
 - * (‘25.12월)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→ (‘26.上) 시범운영 / 수탁 신청기관 : 우체국, 5개 저축은행
- (계약자 신용대출)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계약자 대상 온라인 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타당성 등 적정성 검토(‘26.上)
 - * 현업부담 감소 및 추진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신용대출 우선 추진

□ 자산운용 선진화

- (AI 투자) AI 데이터센터, AI 기업 등 총 1조원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(향후 5년간)
 - * 연도별 투자(누적) (‘26) 2,000억원 → (‘27) 4,000억원 → (‘28) 6,000억원 → (‘30) 1조원
- (자산운용) 자본시장간 차별화에 대응한 주식시장 국면별 스타일 전략 구축 및 자체 금리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한 체계적 채권 관리 추진(‘26.下)

전략 4

온 세상을 연결하는 공적가치

◇ 국민 최접점에 있는 우체국이 복지·금융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서비스를 온 국민에게 전하는 디지털 대체·연결수단이 되겠습니다.

□ 국민생활 비서 · 민생 지킴이

- (법제 정비) 국회에서는 복지·행정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우체국을 ‘공공서비스 전달 창구’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* 추진(’26)

* 우체국을 범부처 정책집행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전달플랫폼 활용

- (서민 민생공간) 창업·교육 등 기반 인프라가 철수한 지역*의 우체국을 창업지원센터, 청년 거주공간* 등 생활밀착형 민생공간으로 재편(’26)

* 기재부·국토부 등과 협력하여 우체국을 임대주택 등으로 건축(현재 1,770세대 추진 중)

□ 공익형 수익사업 발굴 · 확대

- (빈집확인 등기) 국토부 등에서 실시하는 빈집실태 조사에 우정 인프라를 활용하여 빈집 사전 확인 조사 수행

* (’25.12) 2개 지자체 시범 → (’26) 대상지역 확산 추진

** 관계기관(국토부, 농림부, 해수부 등)과의 협약 체결(’25.12)



- (주민등록 사실조사) 정부에서 실시하는 「주민등록 사실조사」 시 매일 가가호호 방문하는 집배원을 통해 조사업무 일부 대행(’26)

* 주민등록법상 이·통장이 매년 조사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 일치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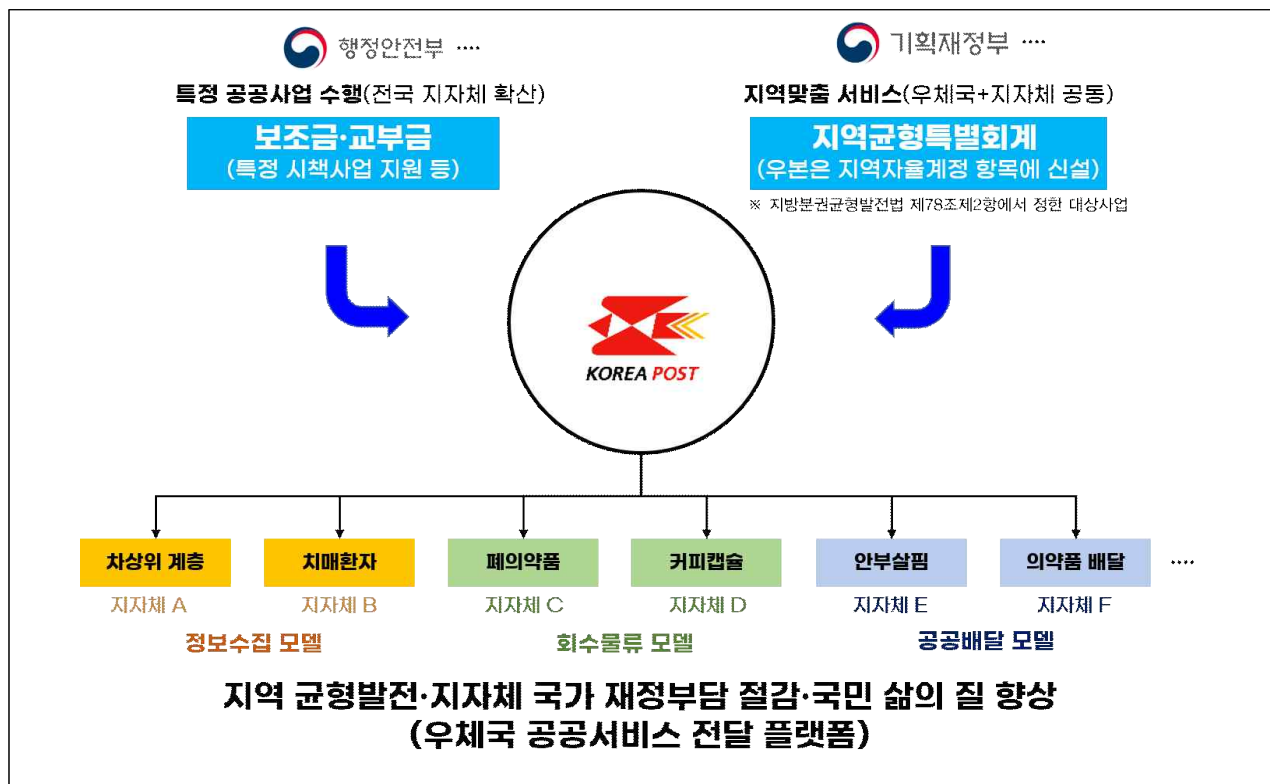
- (POST Recycling) 환경부, 기업 등과 협업하여, 가치는 높으나 회수비가 많아 민간이 수거하기 힘든 재활용품 등 회수물류 서비스 개시

* 회수대상(’26) : 청사매장 음료용기, 전자담배 디바이스, 국립공원 페트병.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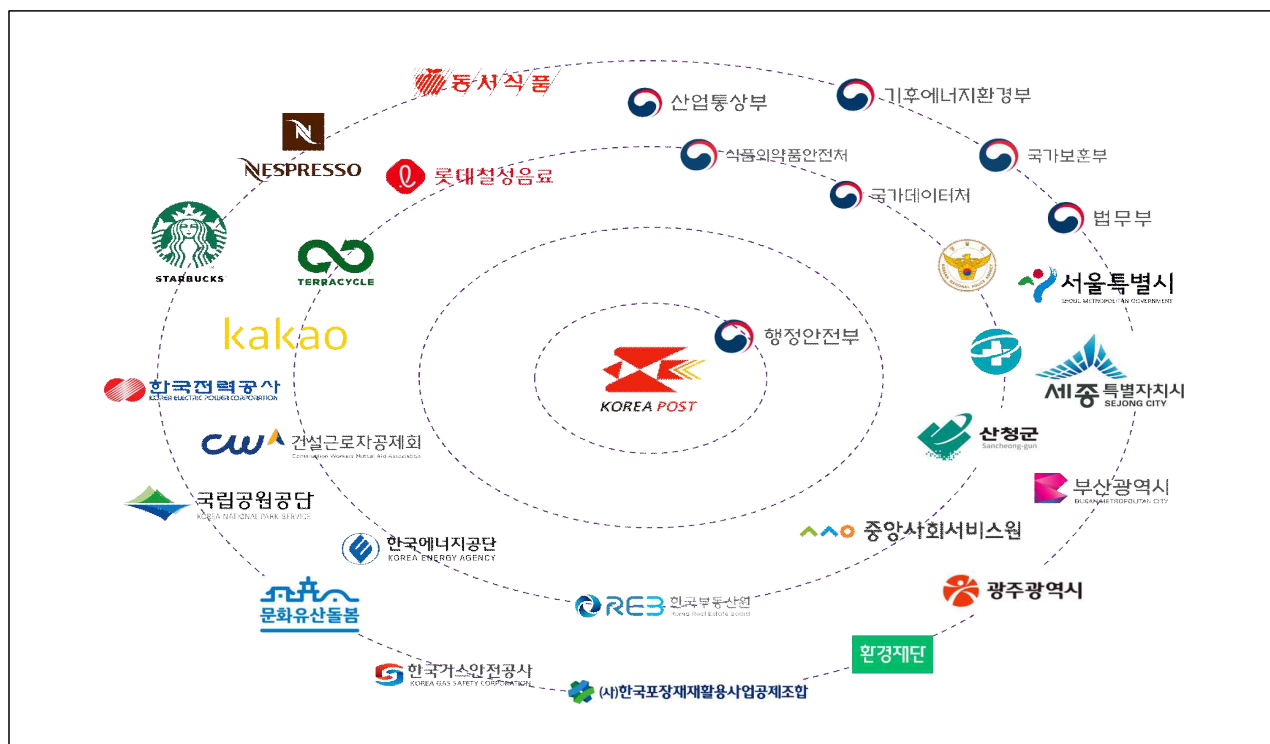
- (보험안전망 제공) 보험보장이 절실한 자립청소년·장애인·임산부 등에 공익보험을 제공하는 등 서민형 맞춤형 보험 개발 확대(’26 ~)

※ (엄마보험) ’25. 9월 출생아의 51% 수준인 10만명 가입, (만원의행복) ’11년도 출시 후 누적 67만명 지원

☐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산



□ **공공서비스 협업 현황**(중앙정부 7개, 지자체 131개, 공공 12개, 민간 6개)



전략 5

안전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

◇ 미래의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등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.

□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

- (현장 전문성 강화) 안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, 위험요인 상담·점검·법령 안내를 자동화하는 AI기반 챗봇 시스템 구축('26)
- (건강관리 강화) 전 직원 대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예방*, 전문적 심리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('26.上)

* 뇌심혈관 질환 정밀검진비 지원 확대,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

□ 일 잘하는 우정조직

- (우분 및 직책 기능 조정) 미래전략 및 신사업 발굴 등 핵심위주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집행기능을 하부조직으로 이관(연중)
- (성과기반 평가시행) 업무 생산성 제고 및 실질적 수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소속기관 경영평가 제도* 마련('26.上)

* 원가 개념이 아닌 수익성 중심 지표 개선, 책임과 성과의 적정 평가를 위한 평가단위 조정 등

- (전문가 채용) 법무, 자금운용, 마케팅, 물류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전문가를 채용하고, 내부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조기 발탁·육성(연중)
- (도심 우체국망 재정비) 우체국 과밀도*,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재정비 추진(연중)

* 서울시 1.6km, 대도시 2.0km, 일반시 2.3km 이상 이격기준 초과 관서 대상

□ 노사 상생문화 정착

- (노동법 개정 대응) '노랑봉투법'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, 복수 노동조합과 효율적·안정적 교섭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대응 준비('26.上)
- (노사 소통 강화) 정부 기조, 노동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유연한 소통 전략을 수립하고, 주요 현안의 선제적 대응과 현장의 노사 갈등 예방 추진('26.上)